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 저 탄소 녹색 성장

2010. 12. 17(금)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 유연철



목 차

I.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 동향

II.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

III.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IV.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VI. '10 캔쿰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6)

VII. 향후 과제

I.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 동향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자유재(free goods) → 공공재(public goods)**
 - 산업혁명 이후 : 공해물질 등 대기오염 등에 직면
 - 2차 대전 이후
 - ▲ 대기분야(런던 스모그 사고 등)
 - ▲ 물분야(수은 함유 폐수 사건 등)
 - ▲ 생태계분야(야생조류 멸종 DDT(살충제)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 ⇒ 환경의 공공재 인식이 대두

- **국내 문제 → 국제 문제화 : 국가간 협력 필수**
 - 1960년 후반 산성비로 인한 다수국가 피해 사례 빈발

- **단순적 접근(환경) → 종합적 접근(과학 · 경제 · 정치 · 법 등)**
 - 광범위한 영향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다양화
 - ⇒ 기후변화 문제가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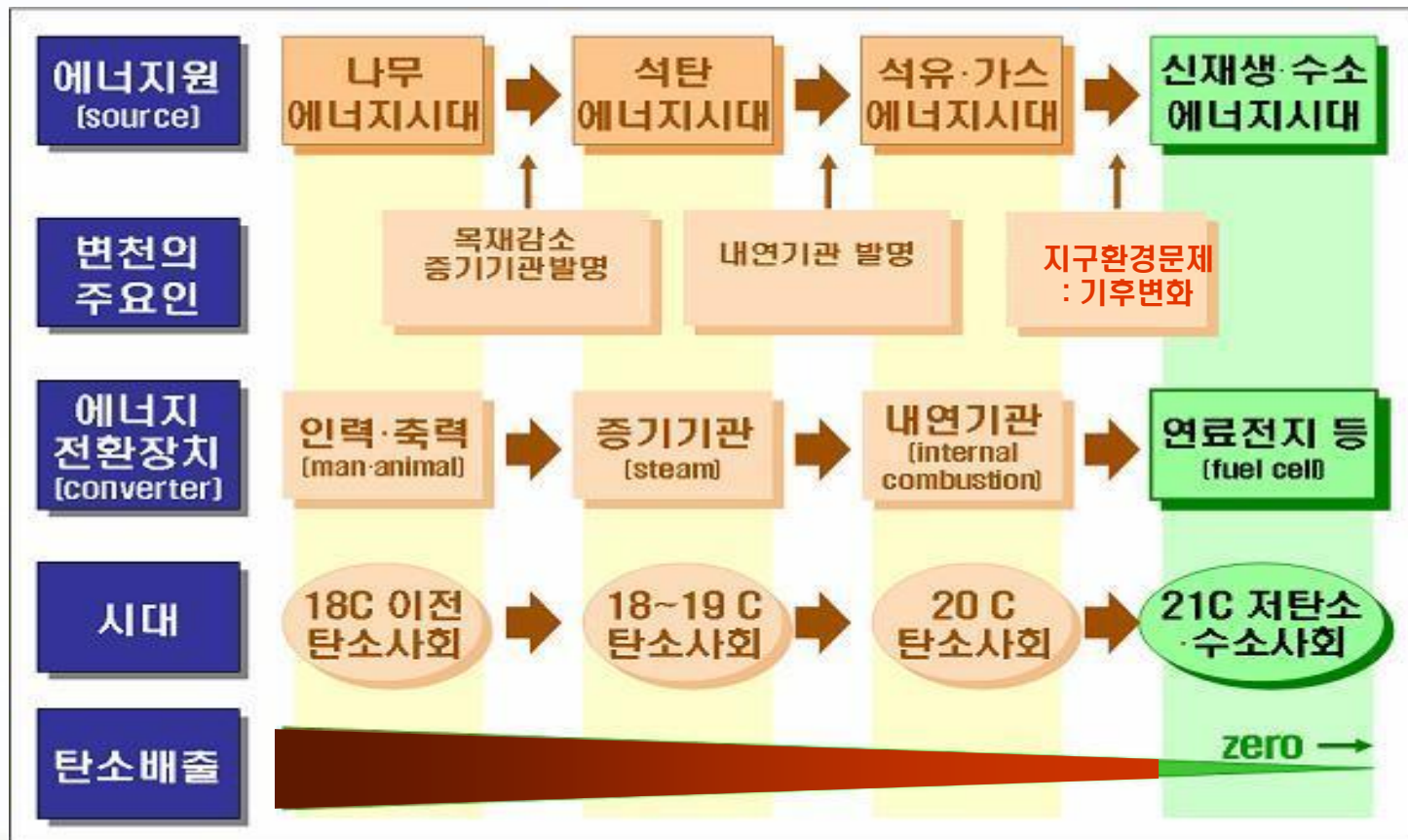
I.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논의 동향

2.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스톡홀름)**
 -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및 세계 환경의 날 제정(6.5)
- **1982년 세계 자연보호헌장 채택**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오)**
 - Rio선언 및 Agenda21,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채택
-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 채택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추진 및 미래세대 (future generation)에 대한 책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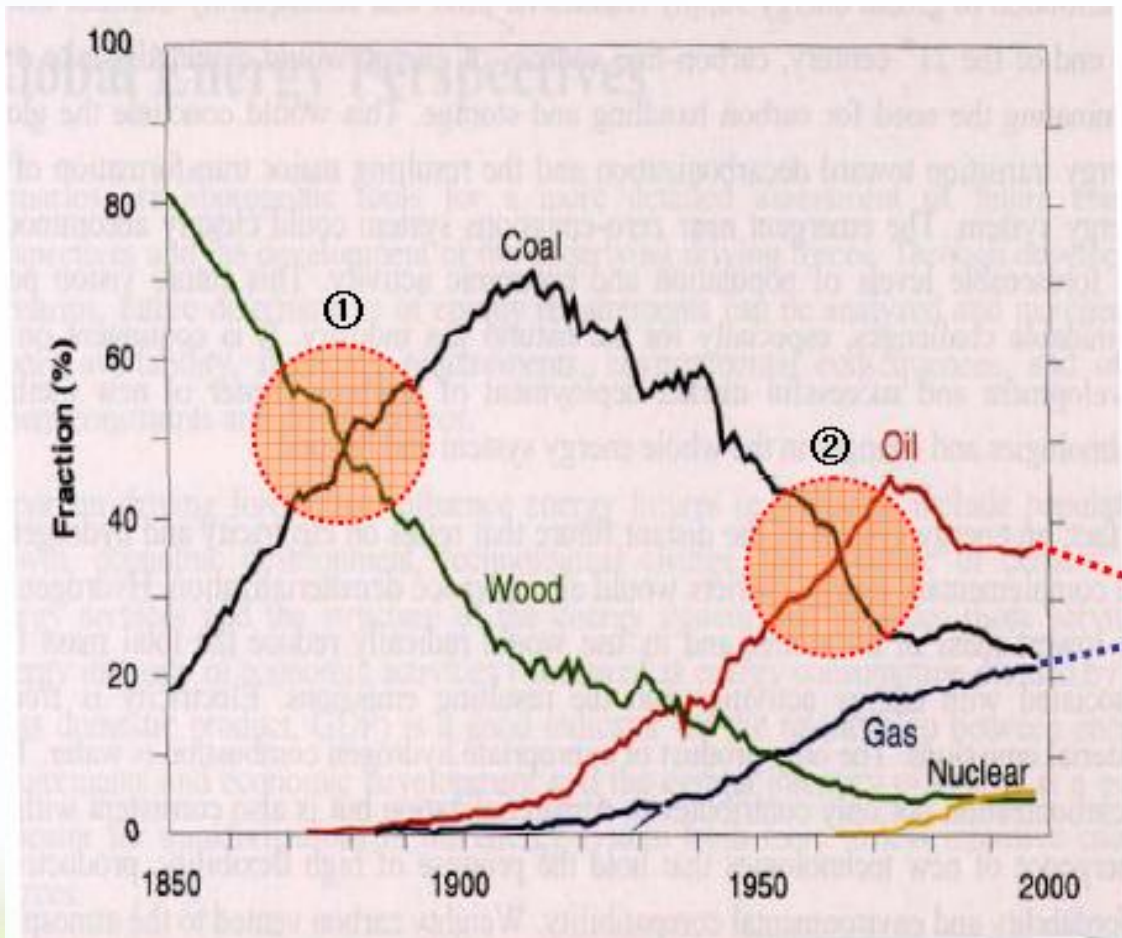
II.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

에너지원의 변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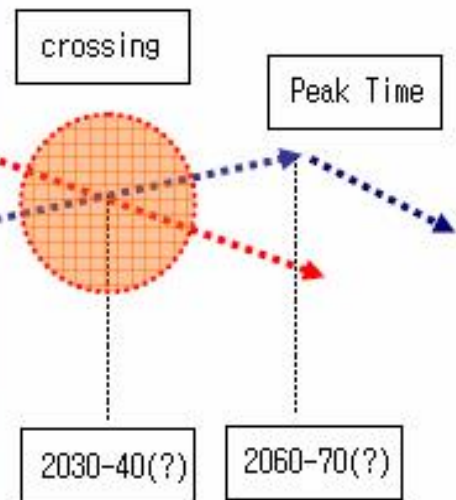
- 기후변화 ➤ 에너지원의 변화초래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에너지원의 변천 (2)



교차점

- ① 산업혁명
: 선진각국 CO₂ 배출
- ② Oil - shock
: 신흥개도국 CO₂ 배출 시작
➤ 감축방안의 차별화 필요



<에너지원천에 따른 분류>

분 류		종 류	향후 추진 방안
화석에너지 (온실가스의 80% 이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효율성 제고 (단기적 과제: 녹색성장의 출발점)
*대체에너지	원자력에너지	○ 원자력(bridging 에너지)	○ 단기·중기적 과제
	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3개분야) -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 재생에너지(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해양, 바이오, 폐기물 	○ 에너지원의 다양화 추구 (중·장기적 과제)
	기타	○ 알코올, 식물성기름 등	

- 우리나라는 ' 87년 제정한 대체에너지법을 ' 04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
- 울돌목의 조류발전소 및 해양에너지 공원단지 조성

▪ 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 **전지구적 차원** : 글로벌 규제 및 모니터링
 - 기후변화관련 : Post2012 기후체제 구축 노력 (협상의 어려움)
 - * 원인제공국(선진국)과 피해국(개도국)의 상이 및 대안 모색의 장기화
- **각국**의 규제대응 : 예) EU의 자동차 규제 (2012년 시행)
(1km 주행시 130g 이하 탄소 배출량 규제, 초과시 1g당 20유로 벌금)

▪ 국제적 외부환경의 변화

- 저탄소제품 구매, CO₂감축의 상품화: 경제적 이익창출기회
- ➔ **Green Race**로의 변화 : 100m 달리기 ➤ 110m 허들경기
(경기규칙이 아닌 경기종목의 변경)
- 저탄소 사회로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코펜하겐 합의문 :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의 필요성 포함)

■ 한국의 여건: 세계10대 에너지 소비국

-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97% 해외 수입)
- 급증하는 에너지 수입금액
 - 588억불('05년) ➤ 1,236억불('08년) : 2배 이상 증가
 - ※ 2008년도 정보통신기기(526억불), 자동차(311억불), 선박(393억불)의 수출총액(1,230억불)과 유사
 - 원유 10불 증가시 90억불 추가 부담
- 에너지 다소비 · 탄소과다 배출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 21세기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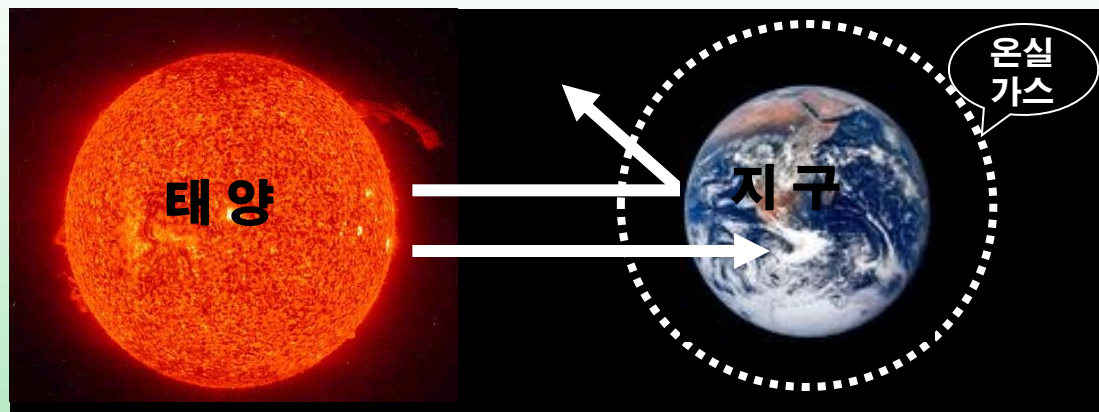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08년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 성장이고,
▲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 저탄소사회는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길
- 한국의 경우 : 적극 추진 필요 이유
 - ① 자원 빈국의 好機 ② 自生力 강화의 계기 ③ 초기시장 선점효과

Ⅲ.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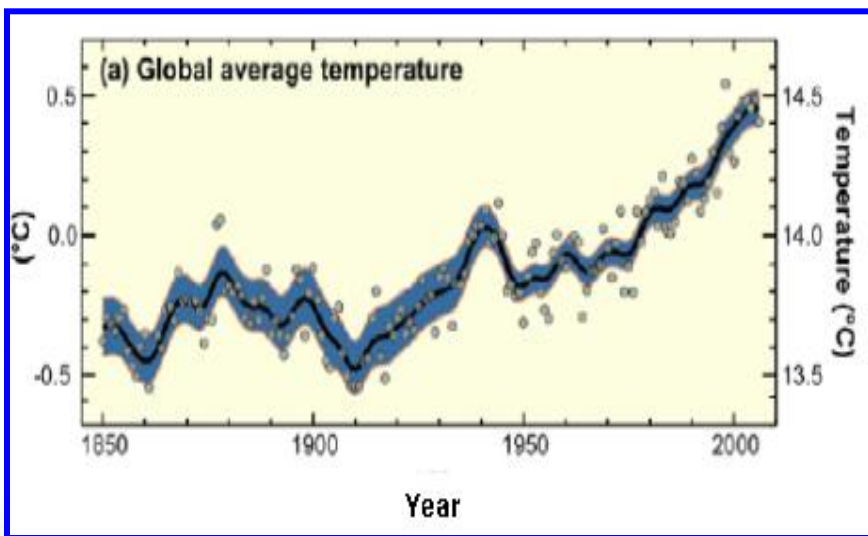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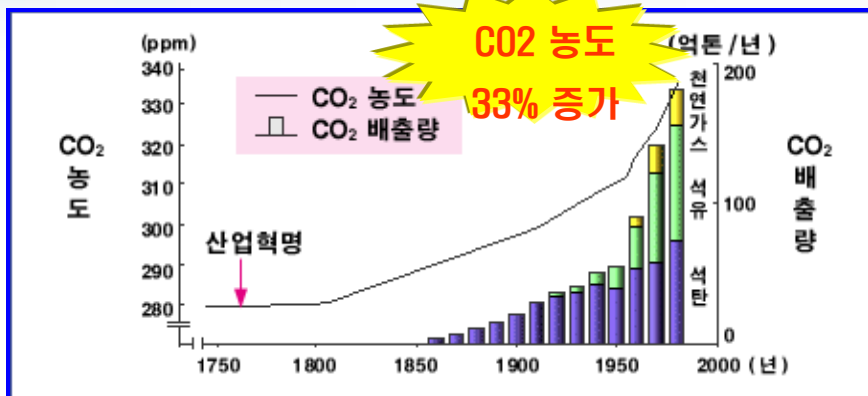
1. 기후변화의 원인

- 온실가스가 지구주변에 막을 형성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 온실가스 막으로 인해 태양에너지 반사 곤란
→ 지구 온난화 효과

지구의 기후변화



전지구 CO₂ 평균농도:
280ppm(산업혁명 이전)
⇒ 379.1ppm

지난 100년(1906~2005)간
전 지구평균온도는
0.74(0.56~0.92) °C 상승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C
해수면 59cm 상승 전망(IPCC)
-2050년까지 450ppm, 2° C이내 상승 등 필요

한반도에서도 기후변화 위기 조심



한반도
온난화

- 지난 100년간 한반도 기온 1.5도 ↑,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
- 1920년대 이후 겨울이 한 달 정도 단축, 여름은 20여일 증가
- 최근 매미, 루사 등 초대형 태풍 집중 ('00년 이후 매년 2.7조원대로 확대)
- 집중호우 : 최근 10년 2.8일/년으로 평년대비 0.8일 증가
- 폭염피해 사망자수는 최근 10년 2,127명, 말라리아 환자는 '07년 2,227명

2. 기후변화의 영향

기상 재해



-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 다발
-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 11조원

빙하 · 해수면



- 북극 해빙속도가 최근 2년간 10-15배 증가
-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매년 1.8mm씩 상승

생태계 · 건강



- 열대성 종의 북상
- 아열대성 전염병 확산
- 3.5°C 상승시 생물종의 40~70% 멸종

현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GDP의 1% 이내, 향후 무대책시 피해비용은 연간 세계 GDP의 5~20%('50년까지)

IV.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개관〉

1992

기후변화협약 채택 ('92)

리우회의
(환경개발회의)

1997

교토 의정서 채택 ('97)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 부속서 I 국가, 08-12년중 1990년대비 5.2% 감축

2007

발리행동계획 채택 ('07.12)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

- 선진·개도국 모두 감축 행동 필요
- POST 2012 협상을 09년까지 진행

2009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 ('09.12)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

- 주요 28개국 [한국포함] 합의문 도출, 총회에서는 미채택

IV.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 **1992년 채택, 193개국 가입**
 - 목표 :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 원칙 :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능력 등
- **부속서 I 국가(선진국) vs 비부속서 I 국가(개도국)**
 - **부속서 I 국가** : 90년 수준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 목표
 - 92년 당시 OECD 회원국(24개국) 및 동구경제전환국(16개국)
 -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

IV.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1997년 채택, 183개국 가입

주요 내용

- ✓ 6개의 온실가스 규정 :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 ✓ 부속서 I 국가들의 수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규정
 - 2008년-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EU-8%, 미국-7%, 일본-6%, 호주+8% 등)
 - ✓ 신축성 메커니즘 도입 : 비용 효과적인 타국 감축분 구매
- ✓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ETS)

IV.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 **2001년 미국의 비준거부 : 부시행정부**
 - 잃어버린 8년 : 미 산업경쟁력의 약화 초래
- **2005.2 교토의정서 발효 : 러시아의 비준('04.11)으로 가능**
 - 미국·러시아 양국 모두 미비준시 발효 불가능
(발효요건인 선진국 배출총량의 55%에 미달)

3. 발리행동계획('07.12월 채택)

- **Post-2012 협상체제 협상의 기본구도 합의 : two tracks**
 - ① 기후변화협약 track (선진·개도국 대상)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개도국 장기 협력 행동방안 논의
 - ② 교토의정서 track (선진국 대상)
 -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문제 논의
 - 협상시한 : 2009년 말

IV.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 Post-2012 협상 경과 ('08~'10)

■ 협상쟁점

	선진국	개도국
기본대응	Action for Action	Action for Money
합의 결과물의 형태	Single legal instrument - 교토의정서 폐기 의미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
감축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및 검증 (legally binding)	선진국의 수준 높은 선도적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재원	시장 메커니즘 활용 선호	선진국의 GDP의 0.5~1% 요구 (ODA 추가분)

* 우리나라에 대한 구속적 감축 의무 수용 요구(EU · 일본 · 호주 등)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개 관〉

- ✓ 사상 최초로 각국 정상 대부분 참석 : 전세계의 이목 집중
- ✓ Post 2012 체제 구축의 실패 : 협상시한의 연장
- ✓ 불완전한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 : 향후 협상의 준거
- ✓ 우리나라의 성과
 - 기후변화대응의 핵심국가로 부상
(선도적인 중기온실가스감축발표 및 협상안 제시 등)
 - Non-Annex I(비부속서 I) 지위 유지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1. 주요 의의

- **역사상 최초로 각국 정상 대부분의 참석 및 협상 참여**
 - 글로벌 이슈로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최대로 부각
: 전세계의 이목집중 및 각국의 political agenda화
 - **기후변화에 대한 public awareness의 제고**
 - **Green Growth 개념의 보편화**
 - 대다수 국가는 경제성장 및 온실가스감축의 양립가능성 강조
- ⇒ 에너지원의 변화 및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토대로
경제성장 및 온실가스 증가간 비연계성(decoupling) 개념 확산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2. 회의 주요결과

■ Post-2012 체제 구축의 실패

- 선진국 vs 개도국 시각차로 인한 극심한 대립
- Post-2012 기후체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합의는 물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 채택 실패

■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도출

: 향후 협상의 준거

- 불완전한 내용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후 제출 (' 10.1.31까지)
- 부분적인 합의 : 주요 28개국 (미·일·EU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브라질 등 개도국 포함)간 협의
- 비구속적인 결정 :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주목한다(take note)는 형식으로 채택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주요내용

- 지구평균온도상승 산업화 이전대비 **2°C** 이내 억제 합의
- 기후변화협약 **Annex I 국가들의 경제전반적 배출목표**
2010.1.31까지 제출 : 숫자에 대해 침묵
 - **Non-Annex I 국가들의 감축행동** 2010.1.31까지 제출
-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Registry)** 설치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은 국가보고서에 수록 및 국내적 검증
- 2010-2012년간 300억불 상당 규모 **재원 조성**
 - 2020년까지는 1,000억불 재원 조성 목표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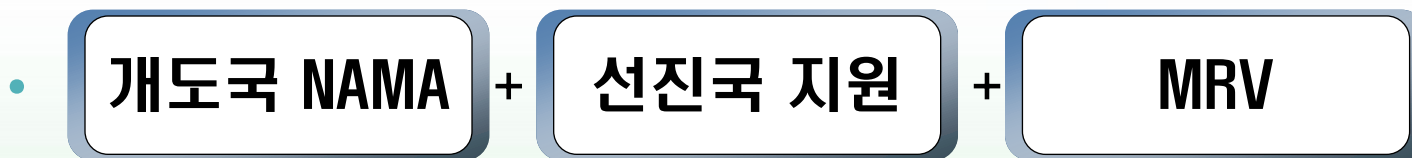
3. 우리의 대응 및 성과 : 국격제고 및 실리확보

가. 우리의 기본 입장

- **범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및 국력에 상응한 기여**
 - 자율적 감축목표 설정 및 선도적 행동
 -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발표
- **협상타결에 건설적 기여 (선진개도국 교량역할 수행):**
3개 방안 제시
 - ① 각국, 특히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사회로의 Paradigm 전환 필요
 - ② NAMA Registry 설립
 - ③ NAMA Crediting 부여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1(b) (ii)의 기본구조



- 발리행동계획 1(b)(ii)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 by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ed and enabled by technology, financing and capacity – building, in a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manner.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 우리 제안서상 NAMA Registry 설치 주요내용
 - 개도국 감축행동의 세가지 유형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내용	자발적 감축행동	선진국 지원 감축행동	탄소크레딧 부여
MRV	자발적 시행	선진국과의 합의에 따른 양자적 기준 시행	국제적 기준에 따른 다자적 시행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 우리나라의 경우 : 유형 ①

자발적 등록

+

구속적 국내이행

+

[국제적 MRV]

부속서 I 편입 또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 부여 법안에 대한 대안

- * Registry는 i) 자발적인 국내 감축 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 및
ii) 개도국의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지원간을 연계하는 도구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나. 우리의 성과

- **국격제고** :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국가로 부상
 - 「Action Together, Me First」 정신을 주창
 - 우리의 자발적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09.11.17 발표) 소개
 - : 2020년까지 통상적 배출량(Business As Usual)의 30% 감축(IPCC권고안 최대치)
- ➔ **행동하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 **협상 및 코펜하겐 합의문 작성 작업에 주도적 참여**
 - ※ 우리나라는 2007년도 Bali Action Plan 초안작성시 미참여
 - ① 우리나라가 제안한 「NAMA Registry」 제도 도입
 - : 개도국 감축행동의 국제적 인정 목적
 - ※ 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 ② 저배출 발전 전략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문안 포함
- 우리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추진 발표
 - 각국의 목표설정(how much) 이후 감축방안(how to) 수립 지원
- 2012년 제 1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희망 발표
 - ➔ 우리의 **녹색성장 비전**이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인식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 **실리확보** : 자발적 행동의 기반 구축
 - 기후변화협약상 비부속서(Non-Annex I) 국가 지위 확고화
 - 코펜하겐 합의문상 국가들을 부속서 및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
 - : 일부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 분류 시도 차단
 - ※ 2007년 발리행동계획에는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애매하게 구분
 - **재원 펀드의 자발적 참여 기반 마련**
 - 기금 조성의 주체가 당초 초안에 ‘모든 국가들’ 에서 ‘선진국’ 으로 변경

V. '09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5)

4. 코펜하겐 총회의 시사점 : 녹색성장의 추진

- 기후변화문제의 각국내 정치의제화(political agenda)
 - 협상타결여부에 상관없이 각국내 기후변화대응 적극 추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 분야별 대책수립 및 추진
- 향후 논의 초점의 전환 : 녹색성장
 - Mitigation(how much?) → Green Growth(how to?)
 -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각국가간 동감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의 불투명성 및 각국의 지속발전 강조
 -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 활발 예상
⇒ 녹색성장전략의 수립 및 추진 필요성 증대

VI. '10 캔쿤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6)

1. 주요 결과: 코펜하겐 플러스의 캔쿤합의 도출

-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UN 체제 내로 수용 : 캔쿤합의 (Cancun Agreement)를 총회 결정문 (COP Decision)으로 공식채택

-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2트랙 협상 구조 그대로 유지**
 - 선진국과 개도국 (우리나라 포함)의 감축행동을 구분 수록
- ✓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강조**
 - 우리나라가 주장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개념 도입
 - ※ 코펜하겐 합의: 저배출발전전략으로 명시
 - ‘low emission’ 에서 ‘low carbon’ 으로 변경 · 구체화
-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담은 등록부(Registry) 설치 합의**
 - 우리나라가 선도한 제안으로 모든 자발적 감축행동 등록 가능
 - ※ 코펜하겐 합의: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은 국가보고서에 수록 명시
- ✓ **녹색기후기금 설립, 적용 및 기술이전 촉진 기구 등 마련**

VI. '10 캔쿤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6)

- **(공유비전) 산업화이전 대비 2℃ 이하 유지 목표 설정**
 - 군소도서국 주장을 감안, 1.5℃ 목표는 추후 검토 예정
 - 저탄소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저탄소 발전전략의 수립 강조
- **(선진국 감축) 감축공약을 참고문서(Information)형태로 확인,**
 - ※ 교토의정서(KP)의 존폐문제는 제 2차 공약기간 및 배출기준년도(1990) 언급으로 지속 시사 - 일본은 KP 2차 공약기간 불참표명
- **(개도국 감축) NAMA Registry 설치**
 - 선진국 감축공약과 동일하게 참고문서(Information) 형태로 확인
 - 우리나라가 주장한 등록부(Registry) 설치, 국제적인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발적 감축행동 등록 (코펜하겐 플러스)
 - 국제적 협의 및 분석(ICA)를 통해 감축행동의 투명성 제고, ICA를 위한 보고서는 2년 주기 제출
 - ※ ICA: International Consultations & Analysis

VI. '10 캔쿤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6)

- **(재정)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설립,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조성 목표 설정**
 - ※ 재원조성관련 미합의: 개도국은 공공재원 활용 강조, 선진국은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재원도 모두 활용주장 등 이견
- **(기술개발·이전) 개도국 입장을 반영, 기술집행위 (Technology Committee) 및 기술센터로 구성된 기술 메커니즘 설립 합의**
- **(적응) “캔쿤 적응 체계 (Cancun Adaptation Framework)” 채택 및 적응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
 - 지역별 적응센터 설치 권장, 개도국에 국제 센터 설치 가능성 검토

VI. '10 캔쿤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6)

2. 회의 평가 : 求同存異의 협상전개로 캔쿤합의안 (코펜하겐플러스) 도출 및 협상의 UN Process 정통성견지

→ Post-2012 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1단계 출발 (선진국 감축분야 등은 미결)

- **작년도 코펜하겐회의시의 “실패” 에 따른 위기감과 의장국(멕시코)의 회의 진행시 투명성 제고 노력이 금번회의의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 특히 비공식 소그룹 논의도 최대한 투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
- **“균형된 패키지” 를 제시한다는 목표로 협상의 2트랙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구조 유지, 내용 측면 (감축, 적응 등) 등에서 균형 유지**
 - 부속서1과 비부속서1 국가간 감축행동 구분 등재
 - **개도국 감축행동 공식화와 선진국의 재정·적응·기술 지원간 상호 교환**
- **우리나라는 감축행동에 있어 부속서1국가와 비부속서1국가로 구분하는 구도에 따라 비부속서1국가 유지**
 - “등록부(Registry)” 를 통해 우리나라의 감축행동 인정 메커니즘 확보
 -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저탄소 발전전략 개념으로 합의문에 구체화
- 우리주장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도입

VI. '10 캔쿤 기후변화총회 결과 (COP16)

3. 기타

- '10. 6월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부대행사의 성공적 개최: 녹색성장의 인식확산 및 각국의 지대한 관심 표명
 - ※ IPCC: 기후변화 원인 분석, GGGI: 기후변화 해결방안 제시
- 덴마크정부의 GGGI 참여 (3년간 1,500만불) 공동기자회견 개최
 - GGGI 참여 최초 외국정부로 GGGI의 국제기구화 가능성 가시화
- 2012년 COP18 유치건은 내년 6월 부속기구회의시까지(독일, 본) 선정 목표로 양국간(한·카타르) 협의 지속

VII. 향후 과제

- **Post-2012 기후체제의 구축을 위한 협상 강화 긴요**
 - 새로운 Climate Regime 형성에는 미국 (Annex 1), 중국 (Non-Annex 1)의 참여 문제가 관건: 감축분야 진전 필요
 - 우리나라는 선진-개도국의 가교역할 모색 및 COP18 유치 노력 강화 등 필요
 - **국내적인 이행 노력 강화 :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
 - 2020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의 성실한 이행
 - GGGI의 활발한 대외활동 전개 및 국제기구화 추진
- ⇒ 한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인 자발적 기여확대 모색필요

감사합니다

문의 :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

☎ : (02)735-2536

✉ : ycyoo87@korea.kr

